

일본의 언론 현황과 피해구제제도

우리 위원회는 해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파악과 사례연구를 위해 일본의 신문과 방송 기관을 방문했다.

권성 위원장은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TV와카야마(WTV和歌山), 이세신문사(伊勢新聞社), 시즈오카신문사(静岡新聞社) 등 일본의 지역 신문 및 방송과 일본 내 유일의 공영방송인 NHK(Nippon Hōsō Kyōkai)를 방문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문기간 동안 TV와카야마의 가와구치 마사히로(川口 正浩)상무, 이세신문의 코바야시 센조(小林 千三)대표, 시즈오카신문의 쓰에키 히로후미(末木 宏典)독자상담실장, NHK의 후쿠치 시게오(福地 茂雄)회장 등 일본 언론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언론피해의 사전예방·사후처리를 위한 각 사의 시스템운용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 들어가는 말

일본의 신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9년 기준 일본의 하루 신문 발행부수는 약 5,035만부이며, 95%에 달하는 세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 세계 신문의 판매부수 1위에서 4위까지를 매년 일본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1880년을 전후하여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 오사카계(大阪系)의 양대 신문을 중심으로 대중신문 시대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신문계는 전국지·광역블록지·현(縣)단위 지방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예능 전문지나 정당지·종교지 등 특화지도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다.

1925년 라디오로 시작된 방송은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공공방송인 NHK(1926년에 도쿄방송협회, 오사카방송협회, 나고야방송협회가 하나로 합쳐진 일본방송협회)만이 존재하였으나 1951년부터 민간방

송이 설립되었다. 전후 텔레비전 방송의 대두로 라디오 방송은 사양길에 들어섰으나, 기동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하는 한편 지역화·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생존력을 키워왔다. 방송은 그 형태별로 지상계의 NHK와 민간방송(민방), 위성계의 BS(위성방송)과 CS(통신위성)방송, 케이블계의 케이블TV와 전기통신이용방송으로 구분된다. 또 IPTV 등 인터넷방송과 「원세그」 서비스로 불리는 모바일방송이 있다. 특히 IPTV는 향후 중심적인 방송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에서는 일본의 기술이 국제 표준화로 채택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통신사로는 교도통신(共同通信)과 지시통신(時事通信)이 있다.

일본의 방송은 1925년 도쿄방송협회의 본 방송 시작에서부터 거대 신문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도쿄방송협회의 임원들 중에는 도쿄아사히신문사, 고쿠민신문사, 호우치신문사(요미우리신문), 도쿄니치니치(마이니치신문)의 임원이 포함되었고, 각 신문사



권성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NHK를 방문, 후쿠치 시게오 회장(가운데) 등을 면담하고, 일본의 언론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명섭 주일대사관 공사(왼쪽 첫번째)가 동석했다.

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수정 없이 제공받은 순서대로 방송할 정도였다. 1951년 일본 내 민간방송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민방의 면허신청자는 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신문사들이었다. 당시 일본은 군부의 미디어 통제정책에 따라 일본의 각 현에 있었던 다수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해 ‘일현일지(一縣一紙)’ 체제가 구축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의 각 지방에는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린 강력한 지방지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민방의 개국에 지방지의 개입이 당연시된 이유다. 일본의 민방은 전국방송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NHK와는 달리 각 현을 단위로 지역 서비스를 하고, 각 현마다 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 마이니치신문과 TBS, 산케이신문과 후지TV, 아사히신문과 TV아사히, 니혼게이지아신문과 TV도쿄가 동일 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대 신문과 방송의 밀착은 신문사의 재력을 통한 방송국의 경영적 안정을 유지하게 했고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TV뉴스에 반영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제휴의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의 거대 신문사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어 동일 자본 성격을 지닌 일본의 민방이 신문사의 논조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역기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본민방에 NHK 못지않은 고도의 공공성

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일본의 지방지와 로컬 방송국은 오랜 기간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져왔다. 특히 지방지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헌법 9조(전쟁포기조항) 개정 반대하는 등의 논조로 평화주의를 호소하고, 지역민과 지역의 현안을 중시해온 결과, 오늘날 거대신문 3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의 독자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은 이렇듯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보방지와 보도에 따른 인권보호망’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종 우선과 미디어스크럼(집단적 과잉취재)라는 일본식 취재관행은 1989년 ‘산호초훼손’ 조작, 1997년 ‘고베 아동살해사건’, 1998년 ‘와카야마 카레살인사건’, 2007년 ‘아루아루대사전-콩발효식품’, 2009~2010 ‘북한의 김정은 인물사진’ 등과 같은 잘못된 보도를 계속 낳고 있다.

이에 금번 시찰을 통해 조사한 일본지방의 우수 언론사와 유일 공영방송인 NHK의 ‘오보 및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사후처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와 현황을 방문 언론기관들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세신문의 코바야시 센조 대표(오른쪽)와 간담 중인
권성 위원장

II. 지방언론사의 피해구제 현황

1. TV와카야마(WTV和歌山)

일본의 민간방송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구성이나 운영면에서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밀착성과 자유경쟁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TV는 현 단위 2국을, 라디오는 1현 1국 체제로 운영된다.

1973년에 개국한 TV와카야마는 현 내 유일의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한다는 기치를 걸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6~8%에 그치는 소규모 방송국이다.

시청자들의 불만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종합적으로는 편성국에서 하고 있지만, 편성국이 담당하여 좋은 것이 있고 각 개별 부서별로 담당하여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고사관람회가 심의를 하고 있다.(와카야마TV안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함) 각 부서별로 사람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다.

법정기관으로서의 제3자 해결기구 설립에 대한 생각은 있는가?

일본은 한국과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 일본국민은 방송국 내에서 부드럽게 자율적으로 하고 자사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법에 의한 소송까지는 가려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해결하고자 한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기사의 옳고 그름을 그들만이 알게 된다. BPO라는 기구를 통해 해결하게 되면 방송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서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알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기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이세신문사(伊勢新聞社)

이세신문은 1878년 당시 전국에서 일고 있던 자유 민권 사상의 영향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운동 과정에서 마츠모토에 의해 창간된 신문으로써 쇼와 초기(1926년) '1현 1지' 체제 확립에 따른 미에현의 현지(紙)다. 향토신문으로 미에현 특히 현남부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독자를 갖고 있다. 동일제호로 일본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기도 한다.

독자들의 불만유형과 그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독자들의 불만처리는 편집장이 한다. 주로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많이 신청한다. 일반 시민들의 건은 연간 20건 정도 된다. 대부분의 사항은 행정부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기사를 써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분에 어느 정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까지 말하는 독자도 있다.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지?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해결한다. 초상권이나 저작권료로 매년 100만엔 이상 지출하고 있다.

정정보도문의 경우 원 보도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잘못 보도된 것이라면 정정을 물론 사과문도 게재한다.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공동통신에 (48개에 신문사가 포함되어 있음)의 지적을 받는다.

이세신문 기자들이 어떤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문인이라는 말이 있다.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신문인이다. 신문 기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이건 시장이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절대 박수를 치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서 듣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15년 전에 미에현 지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쓴 적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8번 정도 소송이 걸렸다. 다음번 선거에서 그 지사는 낙선했다. 이로 인해 이세신문의 부수가 많이 늘었다. 어떤 강력한 정치인이라도 반대자는 40%가 있다. 6:4의 비율인데 미디어가 나머지 20%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3. 시즈오카신문사(静岡新聞社)

시즈오카신문은 제2차 대전 중이던 1941년 당시 시즈오카 현 내에 있던 시즈오카신보를 주체로 요코마쓰, 기요미즈, 아타미시 등의 일간지 6개사를 통합해 1현 1지 시즈오카신문으로 발족된 것이다.

신문의 사시는 불편부당으로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주장을 갖고 현민의 복지에 공헌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즈오카 지역 특산물을 집중 보도하고, 2005년부터 후지산 유네스코위원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문화, 자연 및 지역사람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 취재보도, 지진에 관한 연재기획 기사게재, 지역아마추어 및 동호인 행사 소개 등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시즈오카 방송과 사회복지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익제기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

독자 상담실에서 독자들의 질문, 불편 등을 다룬다. 지금까지 오보를 해서 정정을 한 경우는 10건도 되

지 않는다. 정정해서 나가는 경우도 이름이나 숫자와 같은 거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다.

1989년 아사히신문은 산호초 자연훼손이라는 조작보도 사건을 계기로 보도에 대한 게이트키퍼를 강화하고 사실보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제3자 위원회인 ‘보도와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안고 있다. 시즈오카신문은 제3자 위원회 형식의 심의 기구가 있는가?

아사히신문은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에 대한 보도와 편집의 방향 등을 정하는 기능을 하는 지면심사위원회와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일반 독자가 보도의 잘못을 호소해오면 이를 심사하여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보도와인권위원회가 있다. 특히, 보도와인권위원회는 제3자적 시각의 자율기구로서는 일본 내 첫 시도일 것이다. 시즈오카신문의 경우에도 독자보도위원회를 2년 전부터 만들어(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 3회 체크하고 있다. 외부, 내부 인사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신문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일본의 공동통신(교도통신)에는 전국적 규모의 지방신문들이 가입돼 편집장들이 활동한다. 그 곳에서 매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정부기관 세미나도 함께 열기도 한다. 공동통신 내에 12개의 신문사 모임인 화요회라는 것도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지역 신문에 대한 포럼을 열기도 하고 매년 1회 지역신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각사(12개 회원사)신문에 ‘지역포럼’이라는 란이 있는데 그 면에 관련기사가 나가고 있다.

III. NHK의 피해구제 현황

NHK는 일본 방송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특수 법인으로서 192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방송협회의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는 1925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방송 업무를 개시한 사단법인 도쿄방송국,

나고야방송국, 오사카방송국의 업무를 통합해 설립된 것이다.

NHK는 2개의 전국 네트워크, 3개의 위성 채널, 3개의 라디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네트워크는 종합TV(General Television, GTV)와 교육TV(Educational Television, ETV)가 있다. 본사는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 위치해 있다.

고충과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담당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NHK에서 시청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자센터는 사내 조직이다. 시청자 콜센터 및 본부와 전국 각 방송국, 지국의 하트 플라자 창구업무는 NHK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외부에 위탁하고 NHK가 감독하고 있다. NHK는 방송국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전국에 방송을 보급시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송서비스를 하는 데 있다. 방송법은 NHK가 그 사명을 다른 사람, 특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설립한 제3자 기관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도 시청자의 의견과 고충을 받고 있다. 전문가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방송국에 전달한다.

2009년도에 BPO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과 고충은 2만4572건이다. NHK는 BPO에 협력해 ‘권고’와 ‘견해’ 등의 지적을 존중하고 방송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신문사(방송국)에 직접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

일본의 ‘정정보송’ 제도는 방송국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해 권리침해를 받은 일반인이 정정보송을 요구한 경우로 제한한다. ‘권리’ 주체로서, 국가는 보통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에 따라 NHK에 정정보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권리침해의 경우 이외에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표현에 대한 지적, 보다 엄밀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망 등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는 있다. 이러한 경우, NHK는 취재대상으로 그 정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지적 내용 등을 듣고 필요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를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례를 파악 정리한 적이 없으므로 몇 건 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최근 NHK에 대한 소송 중 언론자유의 관점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의미 있는 판결이 있는지?

도쿄 ○○의대병원의 의료과실사건 보도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 사건 관련자가 체포됐음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원고는 병원 시설 내와 의사숙소 주변과 같은 환자과 의사의 프라이버시 공간에서의 촬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며, 경찰 발표와 병원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NHK가 촬영한 것은 원고뿐이며, 촬영 목적도 임의동행이라는 공적 관심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NHK가 숨어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임의동행이라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른 아침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취재원이 소수에 그친 경우라도 해당 취재원의 신뢰성이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는 보도기관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뉴스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

NHK의 경우, 인터넷 뉴스 원고는 방송과 동일하므로 인터넷 뉴스에 한정된 명예훼손 대책은 없다. NHK에서는 ‘신방송 가이드라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취재와 제작의 다양한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는 초상권 침해, 성명 침해, 프라이버스 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에서도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NHK를 비롯한 방송국에 대해서도 취재대상자와 취재 카메라에 찍힌 통행인 등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초상권침해와 실명보도 등에 관해 소송에 이른 경우는 NHK의 경우 연간 1건 정도로 많지 않다.

IV. BPO(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 Organization,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

1. 개 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시청자의 기본적 인권을 신속하고 확실히 보호하고, 정확한 방송과 방송윤리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 7.에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NHK, 민방련, 민방련가맹 각사 및 타 이사회가 승인한 일반방송사업자로 구성하고 회비(연간 약 4억 엔)로 운영한다. 이사장, 이사 9인(NHK 3인, 민방련 3인, 방송사업자 3인), 감사 2인, 평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BPO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과인권 등권리에관한위원회’ (9인 위원)는 방송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인과 방송국과 서로 합의가 안 돼 고민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심리하고 ‘견해’ 또는 ‘권고’를 결정한다.

‘방송과청소년에관한위원회’ (7인 위원)는 청소년관련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기본으로 심의하고, 심의에 근거한 ‘견해’와 심의내용, 시청자의견 개요 등을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공표토록 한다.

‘방송윤리검증위원회’ (10인 위원)는 방송윤리를 높이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의하고,

만일 허위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오해를 준 의심이 있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경우, 조사·심리를 통해 ‘권고’ 또는 ‘견해’를 결정, 공표하고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해 그 실효성을 조사한다.

BPO에 접수된 시청자로부터의 의견과 고충은 전체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2만 4572건이었다.각 방송국은 BPO와 합의서를 체결해 BPO에 대한 협력 자세를 밝히고 있다. BPO에서 ‘권고’나 ‘견해’ 등의 형태로 지적을 받은 경우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대처하고, 그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최근 4년간 BPO의 결정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송과인권등 권리에관한위원회	견해2건 (시청자의견 211건)	견해5건 (시청자의견145건)	견해3건, 권고1건 (시청자의견 79건)	견해 2건, 권고2건
방송과청소년에 관한위원회	요망1건 (시청자의견2,319건)	견해1건 (시청자의견 2,214건)	주의환기1건 (시청자의견1,498건)	요망 1건
방송윤리검증위원회	견해등1건 (시청자의견4,724건)	견해등3건 (시청자의견7,554건)	견해등1건 (시청자의견8,765건)	견해등 3건, 권고 1건

IV. 방송프로그램에 관계되는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1. 행정처분

행정청(총무성)처분으로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이익처분으로는 행정청

이 법령에 기인하여 사회적으로 저명한 특정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위해 수속(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 부여)을 밟고 불이익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방송프로그램에 관계되는 행정처분(불이익처분)이 내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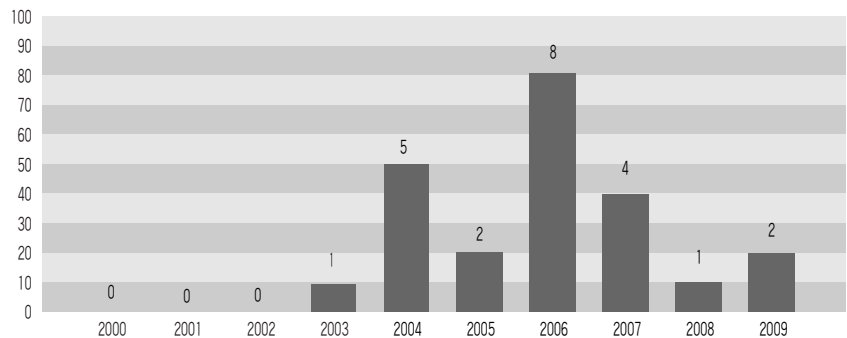
사례는 없었다.

2.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임무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인물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그 외의 행위에 있어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적어도 해당 행정기관의 임무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 및 행정지도 내용이 철저히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에 의해 실현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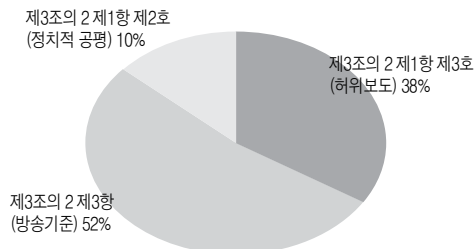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 건수 및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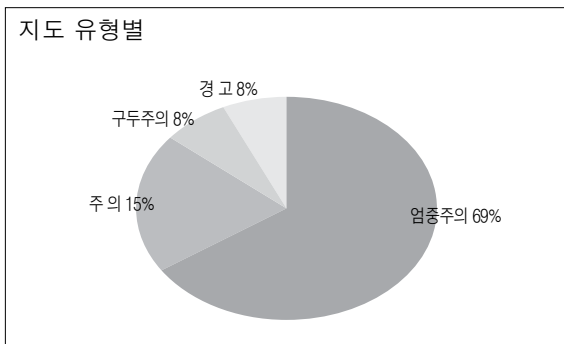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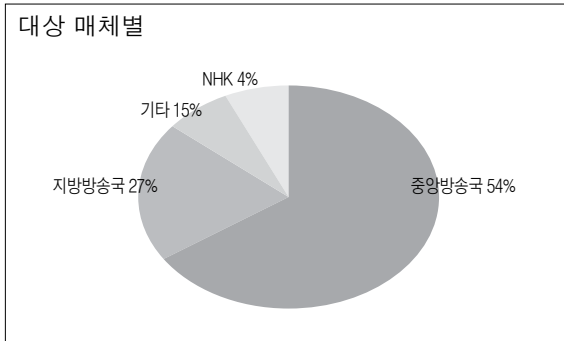
① 행정지도 건수



② 내역

방송법 위반조항별





VI. 맺는 말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지해 오던 절대적 자유주의의 언론자유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으로 언론에게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게 하는 현대적 의미의 언론자유로 넘어왔다.

오늘날 언론은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언론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 혹은 타율적 규제 방법을 선택

하고 있다.

일본언론의 사회적 책임시스템은 자율적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지면심사제도, 방송사의 사내 방송프로그램심의기관과 JPO(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프레스옴부즈맨이나 프레스협회 그리고 미국언론의 사내 옴부즈맨 제도와는 다른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다. 옴부즈맨이나 프레스평의회제도가 사전심의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들 기구는 사후심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면심사기구와 방송심의기구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문제를 심의하는데 대부분이 사장직속이나 편집국(보도국)소속이다. 그 실효성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NHK와 민영방송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BPO의 경우도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언론이 자율적으로 정한 약속을 스스로 준수해 나가지 못하면 중국적으로는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권피해구제기관의 설치여론이 명분을 얻어가고 있다. 또 일본 총무성이 방송 프로그램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독립 행정위원회(일본식 FCC)를 만들어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일본식 자율규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